



국토연구원
개원39주년 기념 세미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박미선

(주택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KRIHS



차 례

주거안정지원
'국토연구원'이 이끌어갑니다.

- I. 여건변화와 1인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
- II. 1인 청년 주거실태와 정책현황
- III. 청년가구 주거 불안정성 분석
- IV.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I. 여건변화와 1인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

1. 기존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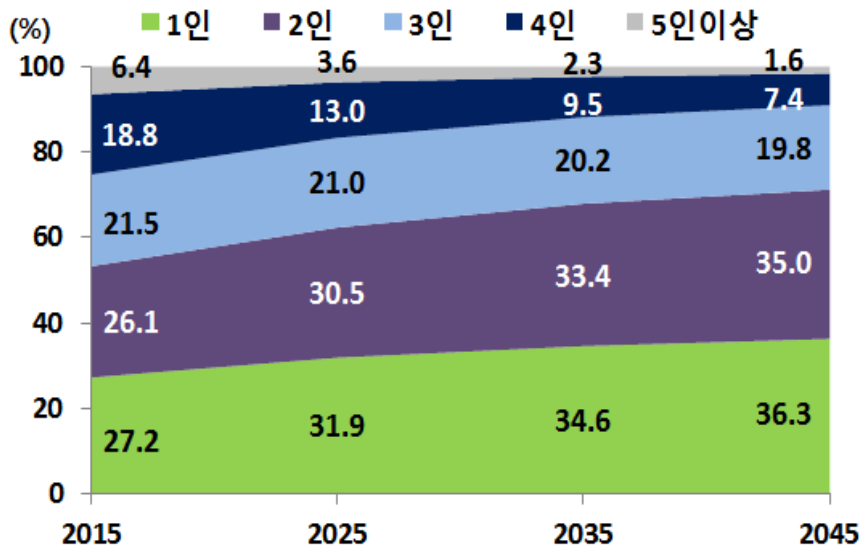
- (주택정책 주안점) 가구주 중심, 저소득층 중심, 취약계층 중심
 - 주택의 절대적 부족, 제한된 자원의 배분 형평성과 효율성 고려
 - 유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가구 중심 우선공급이 사회적 정당성 확보
 -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잔여적 복지모델
 - 근로능력자, 자녀 양육부담이 적은 대상은 정책우선 순위 低
- (주택가격, 지원방식)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증가
 - 주택가격 상승 →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부담 가중
 - 임차시장 진입 주된 대상은 20대 청년, 보증금 적고 임대료 높은 월세로 진입 양상 ↑
 -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지원 방식: 수입증명이 어려운 청년 지원의 한계

2.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 (가구구조) 1인가구 급증과 정책적 대응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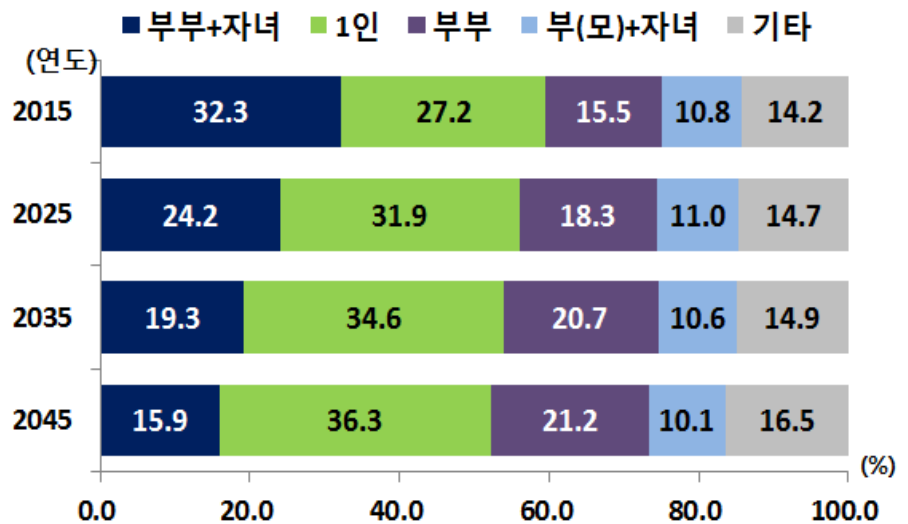
- 1인가구 급증, 정책적 대응속도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 청년문제는 가정내 문제 →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 지배적: 정책접근에 한계

<가구원수별 구성비 (2015-2045)>



자료: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 2015-2045 보도자료

<가구유형별 구성비 (2015-2045)>



자료: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 2015-2045 보도자료

2.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 (사회환경) 과거 부모세대 부양 → 주택상속의 구조 변화
 - 청년세대가 처한 여건 및 주거환경 변화와 함께
 - 부모세대의 여건 자체도 과거와 다른 양상

<1인 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이슈>

구 분	과 거	현 재	이 슈
열악한 주거환경	일시적, 과도기적	구조적	고착화 가능성
부모지원	일부	부모 지원에 따른 격차	사회적 불평등이 주택부문에서 재생산
부모세대	노부모 부양 & 주택 상속 패키지	부모 노후(주택연금) 자녀 지원 여력 하락	자가마련 가능성 하락
점유형태	자가 선호 전세 ⇒ 자가로 이전	자가마련 요원 보증부월세 우세	주거사다리 붕괴
사회적 파급효과	결혼, 출산, 양육 지속	비혼, 만혼, 출산 지연 및 포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활력 저하

자료: 저자작성

3.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

- (예방적 조치) 문제 발생의 사전적(preventive) 예방조치
 - 호주: Homeless 전략시 사회재진입을 위한 사회적 비용 ↑
 - 교육, 직업, 훈련에 미참여 상태(NEET) 청년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화 방지
 - (이행기 지원)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이행기(transition) 성격
 - 청년기는 교육과정 이후 사회진입, 생애주기(결혼, 가구형성, 출산) 진행을 결정하는 시기
 - 서구에서는 이행기의 장기화, 고착화 문제에 대한 우려 ↑
- **임차세대(Generation Rent):** 청년의 과도한 주거비부담, 자가소유 가능성 하락, 주거사다리 상향이동을 못하고 임차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 표현
 - **얼어붙은 이행기(frozen transition):** 과도기적 이행기가 되어야 할 청년기가 장기화 → 부모 동거 ↑, 결혼 및 출산 지연 또는 포기 ↑, 다음 생애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고착화되는 사회문제 증가
 - **동아시아:** 부모 무한책임주의적 사회인식에 따라 청년의 독립과 이행기 진행이 원활치 못한 현상 발생

4. 1인 청년 맞춤형 지원 필요

- 주택 탐색 및 거주과정에서의 불이익과 차별 해소 필요
 - 주택임대차 경험 부족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과도한 임대료 부담, 불필요한 비용 부담요구 등에 노출, 방어능력 약
 - 주거문맹(housing illiteracy) 방지 필요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 불법개조 건축물 중개 대응 불가, 화재시 대피로 확보 미비, 안전 취약,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
- 1인 청년 주거니즈를 반영한 주택유형 개발 필요
 - 3-4인 가구기준 최저주거기준 이외에 1-2인 가구, 쉼어형 주택 개발 등 주거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주택유형 및 새로운 주거기준 개발 필요



II. 1인 청년 주거실태와 정책현황

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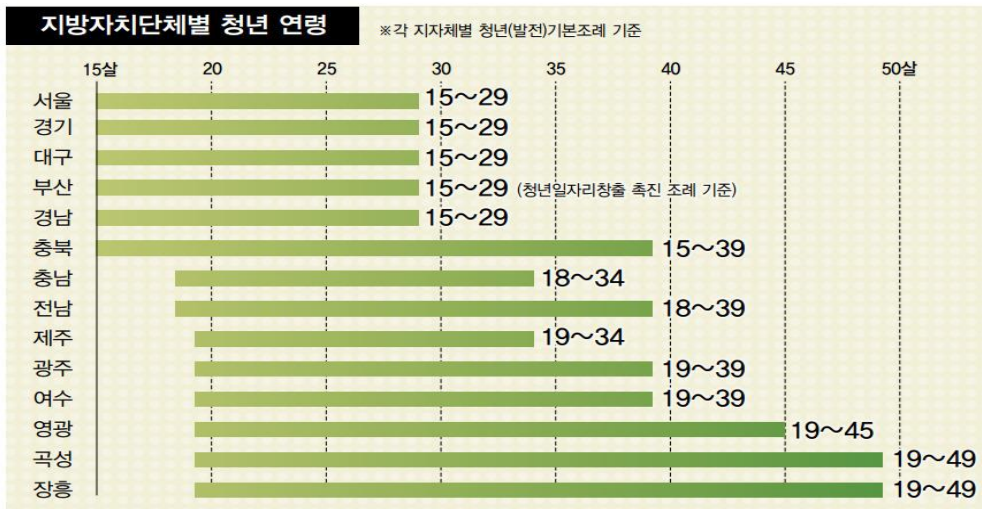
1인 청년가구의 정의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면서 만19세에서 34세에 이르는 가구

<청년관련 주요 정책상 청년 연령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연령>



자료: 한겨레신문. 29살? 39살? 대한민국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2016.9.19.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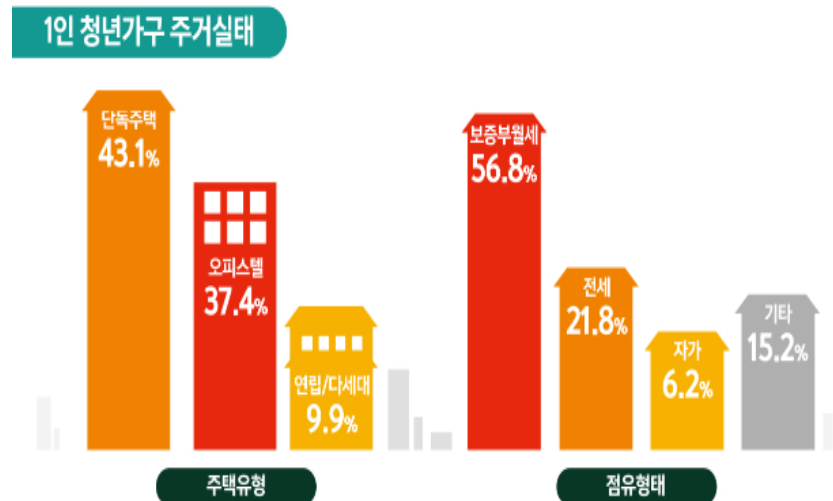
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 주택유형: 단독주택, 오피스텔
 - 단독주택비중 ↑, 수도권은 오피스텔비중 高

<1인 청년 주택유형(%)>

구 분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전 체	35.3	48.1	11.1	1.7	3.1
청 년	50.5	13.9	9.9	0.9	24.1
수도권	43.1	6.5	11.4	0.7	37.4
서울	48.3	5.9	9.1	1.3	33.9
지방	59.7	23.2	8.1	1.0	7.5

자료: 2016 주거실태조사
 주: 1인 청년가구 만19~34세 대상



* 전국 평균 보증부월세 20.3%, 전세 15.5%, 자가 56.8%, 기타 7.4%

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 점유형태: 보증부월세 56.8%
 - 전체가구대비 2배 이상 비중 ↑, 서울은 59%
 - 2년내 주거이동 85.8%, 평균 거주기간 1.1년

<1인 청년점유형태(%)>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무상
전 체	56.8	15.5	20.3	3.4	4.0
청 년	6.2	21.8	56.8	9.8	5.4
수도권	5.5	26.5	59.0	5.4	3.6
서 울	3.9	29.4	60.7	3.0	3.1
지 방	7.1	15.9	54.0	15.3	7.7

자료: 2016 주거실태조사

주: 1인 청년가구 만19~34세 대상

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 주택가격 및 임대료 부담

- 전세 6,476만원, 보증금 987만원에 월세 38만원 수준
- 지방 → 서울 이주시 전세금+2천만원, 월세부담 매월+20만원

<1인 청년주거비 수준>

구 분	자 가	전 세	보 증 부 월 세		보 증 금 없 는 월 세
			보 증 금	월 세	
전 체	2.44억원	1.30억원	2,075만원	31.9만원	24.2만원
청 년	1.73억원	6,476만원	987만원	37.9만원	26.2만원
수도권	2.05억원	7,393만원	1,298만원	44.6만원	27.9만원
서 울	2.39억원	7,705만원	1,645만원	49.2만원	27.4만원
지 방	1.43억원	4,566만원	565만원	28.9만원	25.4만원

자료: 2016 주거실태조사

주: 1인 청년가구 만19~34세 대상

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 주거 취약: 원룸, 지하/반지하/옥탑방 등 거주비율 高

<1인 청년 주거취약가구(%)>

구 분	원룸	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3인+ 단칸방	주거취약
전 체	9.4	3.1	0.4	0.2	3.9
청 년	68.9	5.4	1.1	-	6.7
수도권	70.4	9.7	2.0	-	11.6
서 울	69.0	12.3	3.5	-	15.7
지 방	67.0	-	-	-	0.4

자료: 2016 주거실태조사; 1인 청년가구 만19~34세 대상

- 주거지원 정책수요

- 청년: 전세자금대출 > 월세보조 > 공공임대공급 순

<1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수요(%)>

구 분	월세 보조	전세자금 대출지원	구입자금 대출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개보수	공공분양 주택공급
전체	9.8	19.0	29.7	19.8	10.5	6.2
청년	18.3	37.1	12.3	21.1	1.5	7.4

자료: 2016 주거실태조사; 1인 청년가구 만19~34세 대상

2.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지원

- 행복주택 등 신규공급; 전세임대 등 기존주택 활용 공급; 버팀목 등 자금대출 프로그램

<중앙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정책>

구 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신규공급	행복주택	·일반형, 산업단지형 구분. 일반형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물량을 80% 공급. 면적은 45㎡이하, 시세의 60~80%
	행복기숙사	·대학생 공공주거복지 실현 목적
	사회적주택	·쉐어하우스형. 졸업후 2년 이내 취업생 포함 5년내 사회초년생 대상. 시세의 50% 이하
기존주택 활용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80%
	청년전세임대	·타 시군출신 대학생 및 졸업 2년내 취업준비생 주거독립 지원
자금대출	버팀목대출	·19세이상 세대주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지역별 차등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급여 비대상 무주택자 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월 최대 30만원씩 2년 대출

자료: 저자작성

3.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현황

2) 지자체의 대응

- 서울: 학업, 취업을 위해 이주한 청년의 심각한 주거난 대응 프로그램 마련

<서울의 청년 주거지원정책>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신규공급	희망하우징	· 대학생 대상. 저렴한 주택공급. 시세의 30%(매입 또는 건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 대상 민관협력 주택공급. 공공임대는 시세의 60~80%, 민간임대는 시세의 최대 90%
기존주택 활용	한지붕세대공감	· 어르신과 대학생 매칭. 주거제공. 시세의 50%
	쉐어형 기숙사	· 고시원, 숙박시설 등 매입·리모델링하여 1인 청년에 공공임대로 공급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 빈집 리모델링 후 6년간 청년층 등에 저렴 공급. 시세의 80%

자료: 저자작성

3.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현황

2) 지자체의 대응

- 부산: 청년 대상 저렴임대주택 공급 노력
 - 부산 시민 주거안정대책 6년간 공공임대 7.3만호
 - 청년대상 저렴임대 공급 노력

<부산의 청년 주거지원정책>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신규공급	드림하우스	·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상 시세의 80%, 최대 8년 임대. 2022년까지 2만호 공급예정 · 역세권, 대학가 등 상업지역에 건립
	부산행복연합기숙사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산지역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용, 임대료 월16만원 수준
기존주택활용	햇살등지	· 집주인 빈집 리모델링비용 지원 후 3년간 시세의 50%로 전월세 임대.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등 우선 대상. 2012년 시작 누적 233호

자료: 저자작성

3.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 정책 현황

2) 지자체의 대응

■ 부산 지하철 광고



자료: 저자 촬영

○ 부산드림아파트 개요

총 공급 예정 세대수 | 2만 세대

전용 면적 | 60㎡ 이하

임대 방식 | 최대 8년 간 임대.
주변 임대시세 80% 이하,
연간 임대료 상승률 5%이하

건축 혜택 | 1.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2.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배제
3.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자료:부산시





III.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정성 분석

1.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의 불안정성

- (청년 임차인) 주거문맹상태로 임차시장 진입,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
 - 정보획득: 인터넷 45% > 중개사무소 21% > 지인,가족 소개 17%
 -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에 대한 정규 교육이 부재한 주거문맹 상태로 임차시장 진입
 - 교육보다 실행을 통한 학습, 사기 위험에 무방비 노출(직거래사이트 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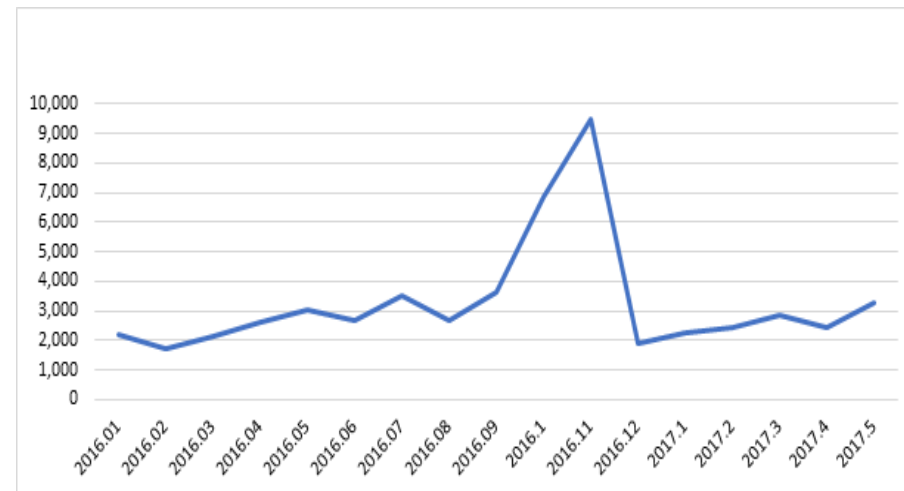
- (중개인) 책임성 및 서비스 수준

- 지불한 비용대비 서비스 수준의 불만족
- 인터넷 제공 정보의 신뢰성 의문

※허위물건(월평균 3천건 이상,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센터)

- 불법개조 건축물 중개

<거짓매물 월별 신고현황>



자료: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센터 거짓매물 신고처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1.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의 불안정성

- (임대인) 전입신고 불허
 - 전입신고 불허: 불법 건축물 개조, 임대수익 노출에 대한 거부감
 -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장치 결여
- (주택탐색·계약과정의 고충) 중개수수료 부담, 대항력·지식 부족
 - 고충: 높은 중개수수료 29% > 가계약 요구 17% > 월임대료 선납요구 15%
 - 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 만족도 53점, 중개수수료 만족도 29점으로 저조

<주택탐색, 계약, 거주과정의 고충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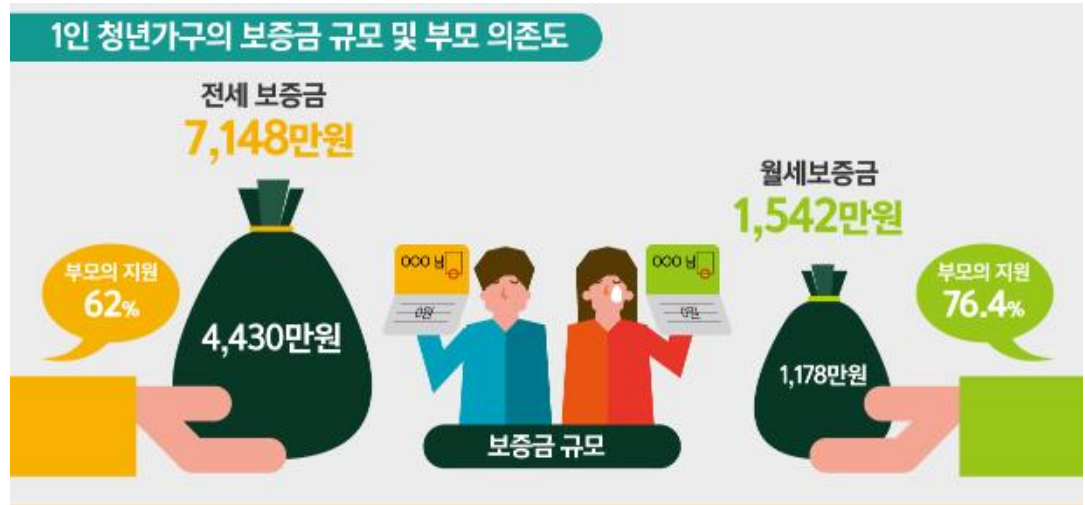
구 분	순위별 주요 내용
탐색과정	(1) 저렴한 주택 부족, (2) 선택의 여지 없음, (3) 주거환경(치안, 시설)이 좋지 않음
계약과정	(1) 높은 중개수수료, (2) 가계약 요구, (3) 월임대료 선납요구
거주과정	(1) 도배장판 거부(비용전가), (2) 보증금, 월세 인상, (3) 공과금(관리비) 과다 요구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2. 거주과정의 불안정성

주거비 마련의 부담: 부모 의존적 삶

- 보증금 70% 이상 부모 지원 의존
- 월 임대료의 65%도 매월 부모 지원 의존



자료: 국토연구원 인포그래픽 이미지

<주거비부모의존현황>

구분	보증금 규모(만 원)	부모지원 규모(만 원)	부모 의존도(%)
보증금 전체	2,066	1,476	71.4
전세	7,148	4,430	62.0
보증부월세	1,542	1,178	76.4
월 임대료	34.6	22.5	64.9
월 관리비	5.0	2.1	42.5
총 생활비	90.3	46.0	50.9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2. 거주과정의 불안정성

▪ 주거비 부담감

- 주거비 종류별 심각한 부담감 표출 (100점 매우 부담 기준)
- 걱정하다고 인식하는 주거비 수준은 현 주거비에서 20~30% 낮은 수준



자료: 국토연구원 인포그래픽 이미지

2. 거주과정의 불안정성

▪ 20대 임금수준 대비 주거비 부담 과중

- 20대 청년 임금 평균 172만원(2015), 정규직 207만원, 비정규직 106만원
- 2006년~2015년 연평균 임금상승률: 20대 정규직 4.7%, 비정규직 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연령대별 근로형태별 연평균 임금상승률(%) (2006~2015 평균)>

구 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정규직	4.4	4.7	3.7	3.7	3.7	4.5
비정규직	2.7	1.7	3.6	3.0	2.7	3.1

자료: 고용노동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RIR 주거비부담 17%~34% 수준 (연립·다세대주택거주 가정시 2015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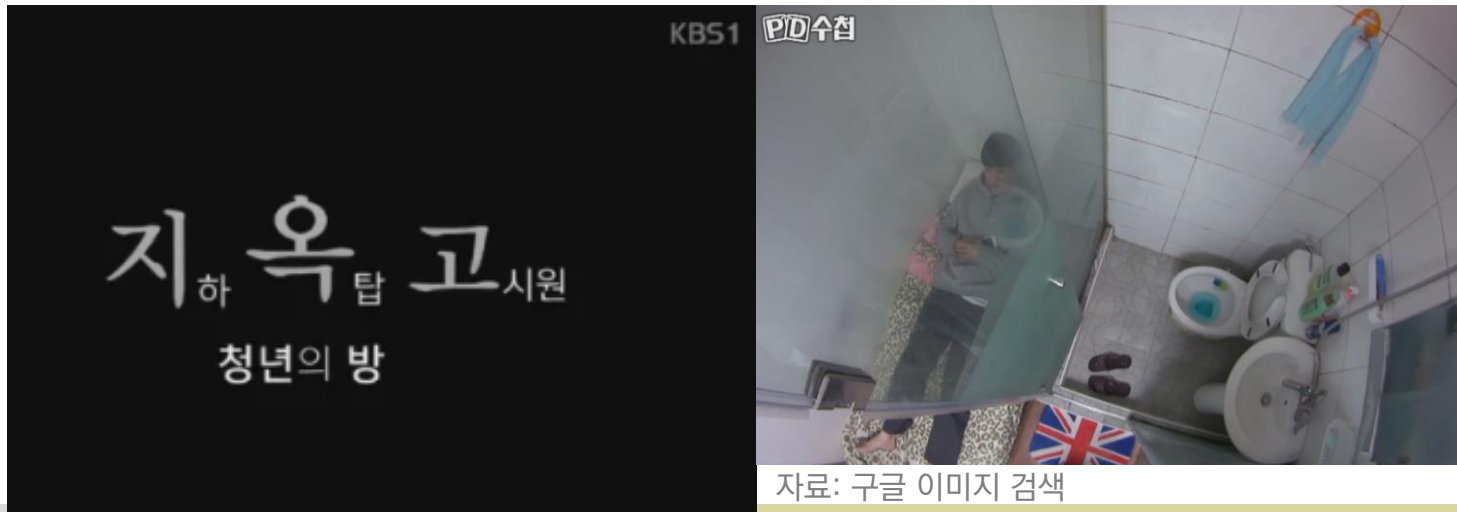
<근로형태별 20대 월세 부담>

구 분	연립·다세대 중위가격(만원)		월세부담(%)	
	보증금	월세	20대 정규직	20대 비정규직
전 국	2,039	36	17.2	33.7
수도권	2,451	39	18.9	37.0
서울	3,732	46	22.1	43.2

자료: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20대 임금: 고용노동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

2. 거주과정의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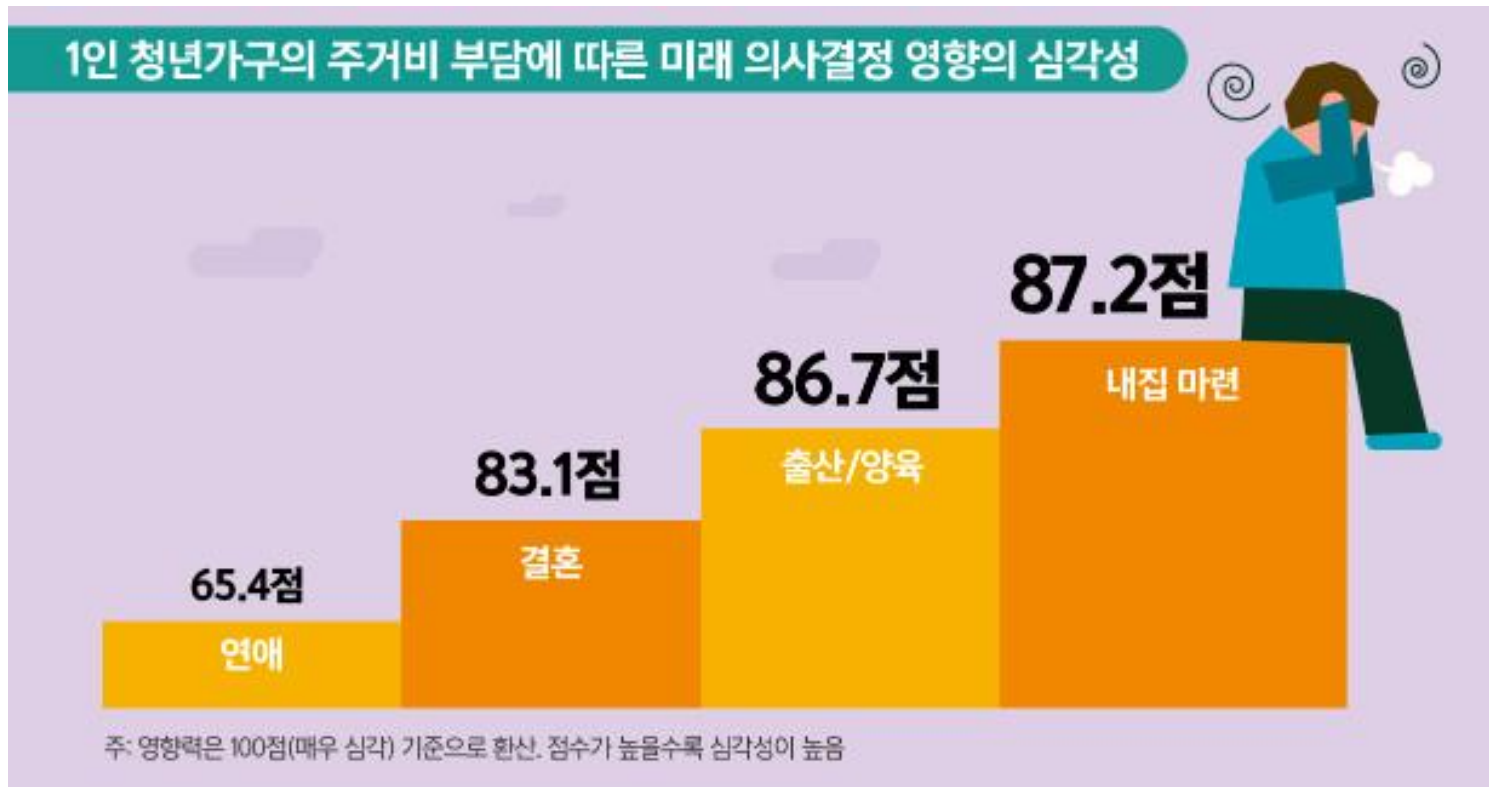
- 주거취약: 안전, 최저주거기준, 주거이동
 -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정 취약
 - **방범창** 설치 요구 관철 ↓ → 거처 **안전** ↓ → 여성들 쉼어하우스 선호
 - 창문없는 고시원 등 경험자 **심리적 불안정, 스트레스 노출**
 - 학업, 취업, 휴학, 군입대 등 청년기 특성상 주거이동 ↑
 - 임차인 보호를 위한 2년 계약기간에 대한 이견 → 6개월 단기 계약 쉼어하우스 선호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3. 생애단계 이행의 불안정성

- 주거비 부담에 따른 생애단계 이행 부담감 심각
 - 연애<결혼<출산양육<내집 마련 순으로 미래의사 결정에 부정적으로 큰 영향



자료: 국토연구원 인포그래픽 이미지

3. 생애단계 이행의 불안정성

▪ 주거상향 이동의 제약: 부모의존도 강화

- 부모지원없이 거액의 보증금 마련 가능성 ↓

• 부모님 도움없으면 월세로 시작해야 한다. 결혼할 때는 부모님 도움이 결정적이다. (직장인 ○○○)

▪ 주거빈곤으로 인한 근로빈곤층 형성, 상실감과 체념, 흠수저 고착론

- Rent poor → Working poor → House poor

• 예전처럼 단칸방에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없다.
혼자서도 이렇게 살기 싫는데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살고 싶겠나?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건 옛날 얘기다.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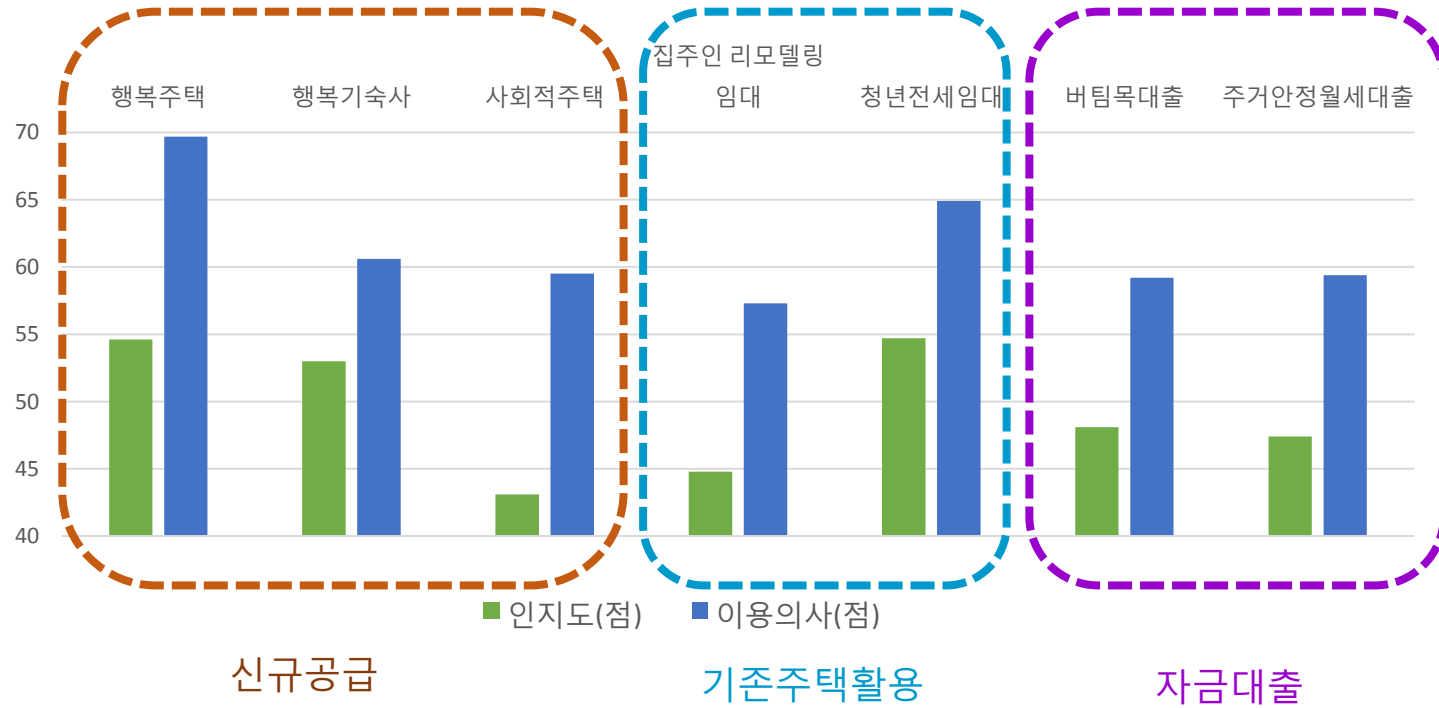
• 한번 흠수저는 계속 흠수저다. 흠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지만 힘든 것이다...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나는 조선시대 소작농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 ○○○)

4. 주거소요: 정책 인지도 및 선호도

청년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의사

-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低,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에 대한 이용의사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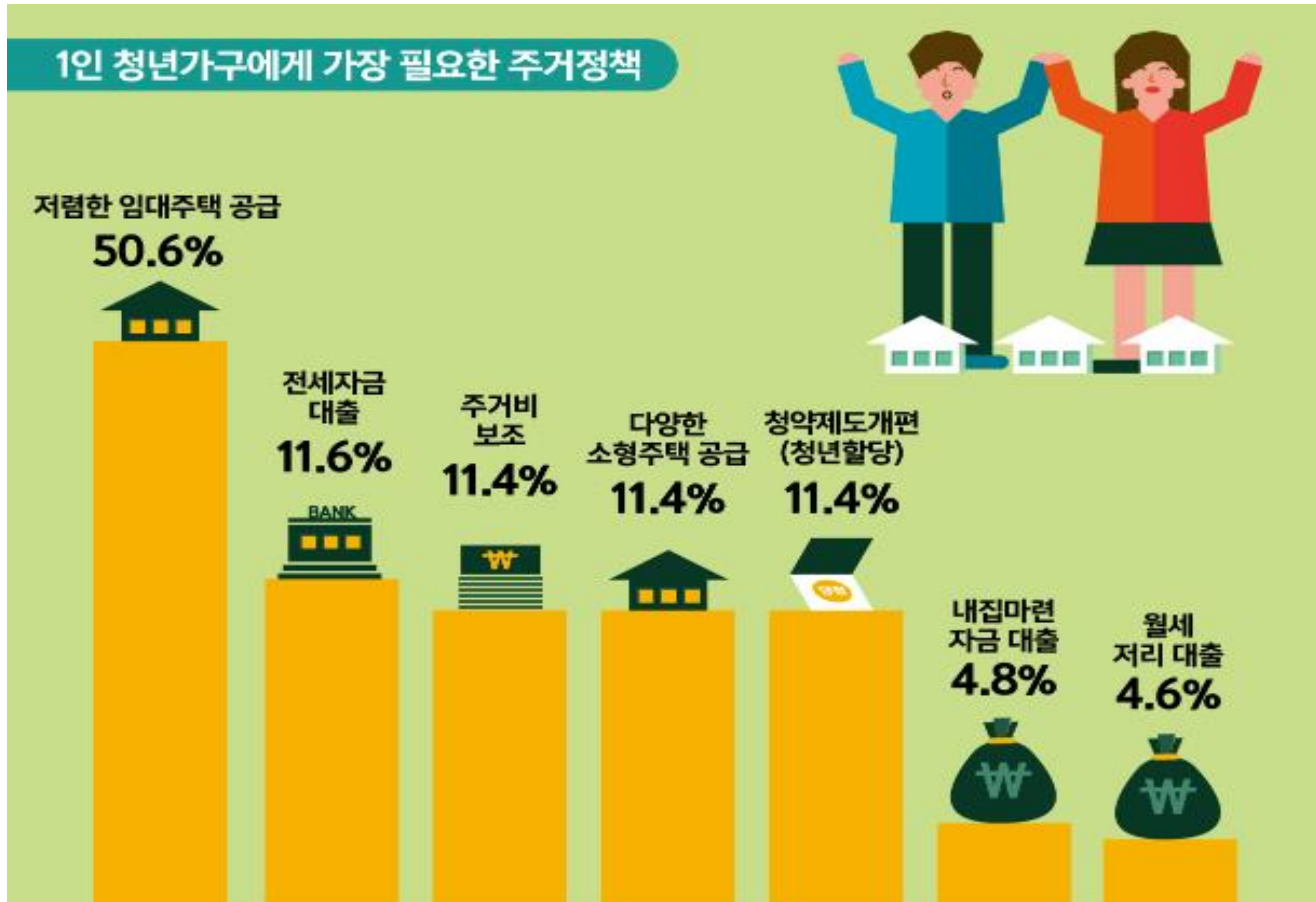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의사>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4. 주거소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자료: 국토연구원 인포그래픽 이미지



IV.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주거지원 정책방안의 기본 원칙

- **(포용적 정책)**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특수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 주거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음. 주거복지지원대상의 저변 확대
- **(이행기 정책)** 생애주기상 과도기적 단계인 청년을 다음 생애주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희유 공급에 목표를 둠
- **(자립강화)** 복지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자립 지원 강화 방안 고려. 일시적 지원, 저리대출, 자립강화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등 활용
- **(책임과 의무)** 공적 자금 수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명확화
- **(맞춤형 정책)** 청년 특수 주거니즈를 반영한 지원 방안 도입, 지역 특수성 기반한 맞춤형
- **치유적 접근 + 예방적 접근** 동시 필요

치유적 접근 (cu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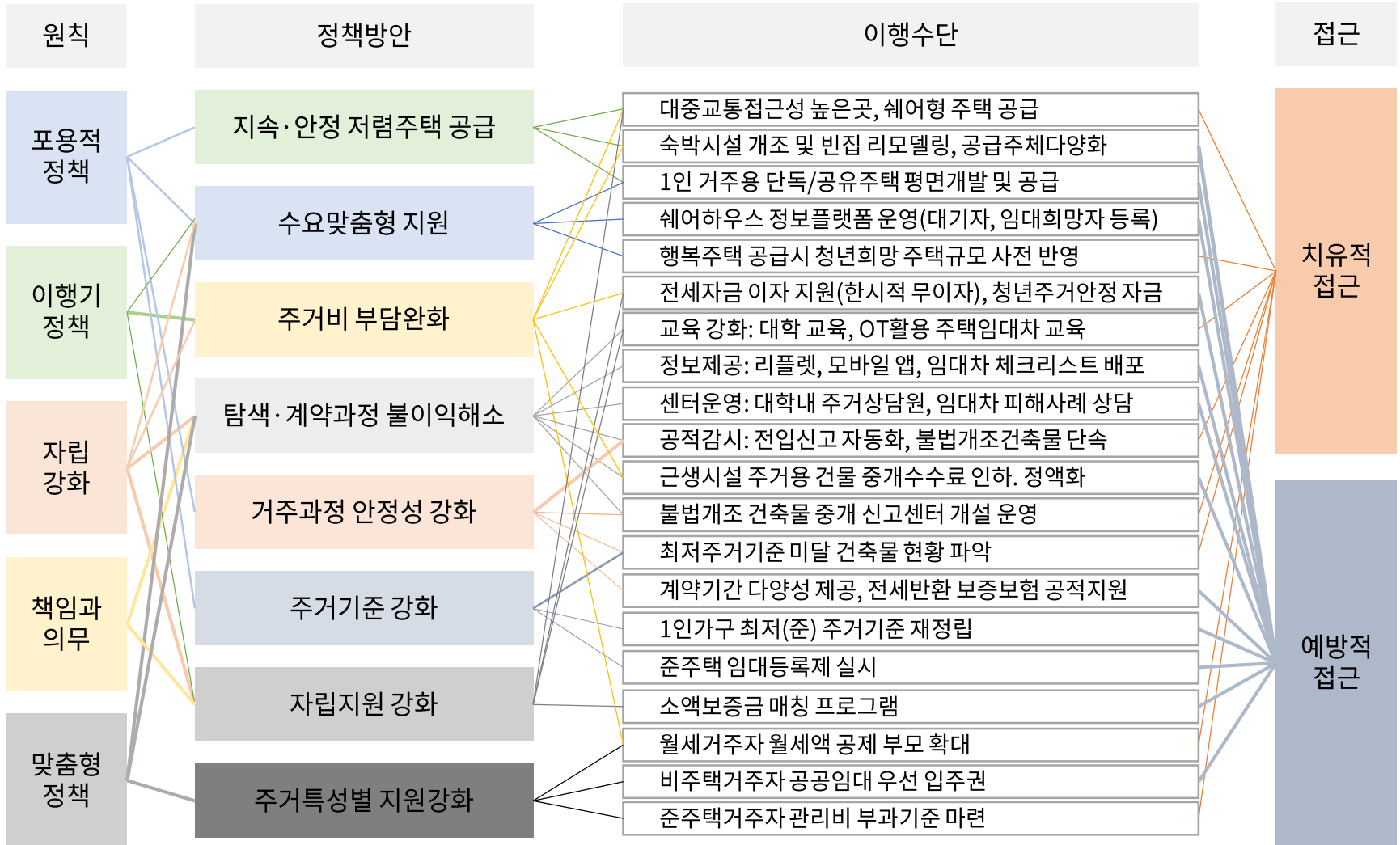
문제 발생 이후
현재 상황에 초점
심각한 주거문제 해결에 주력



예방적 접근 (preventive)

문제 발생 이전
미래사회 준비, 사전대응적 성격
추가문제 발생 및 확산 제어

2. 주거지원정책의 기본 구도



출처: 저자 작성

3.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지속·안정적 저렴주택 공급**
 - 대중교통 접근성 높은 곳, 셰어형 주택, 숙박시설 개조 및 빈집 리모델링 등
 - 사회적 기업, NGO 등 공급주체의 다양화 → 청년 수요 적극 반영
- **수요 맞춤형 지원**
 - 1인가구 거주용 단독/공유주택 평면개발 및 공급
 - 셰어하우스 공급확대를 위한 정보 플랫폼 운영(대기자, 임대희망자 등록)
 - 행복주택 공급시 청년 희망 규모 사전 반영하여 공급 효율화
- **주거비 부담 완화**
 -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한시적 무이자)
 - 2천명X2천만원 보증금대출 이자 지원시(연2.5%) → 최대 10억 소요
 - 주거비 지원액을 저축하여 매칭펀드로 보증금 마련시 지원하는 방안 병행

3.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주택탐색, 계약 과정의 불안정성 완화

- 교육강화: 대학내 기본교육 실시, 오리엔테이션 활용 주택 임대차 기본 정보 제공
- 정보제공: 리플렛 제공, 모바일 앱 활용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 제공
- 센터운영: 대학내 주거상담원 운영, 주택임대차 피해사례 발생시 상담 및 피해방지 교육
- 공적감시: 전입신고 자동화, 불법 개조 건축물 중개 단속(住 파라치),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도 제고
- 중개수수료 인하: 근린생활시설 0.9%내 협의, 주택 0.4%, 일정금액 이하 정액화

<중개수수료 인하, 사회적 책임 강화>

- 근린생활시설 0.9%내 협의, 주택 0.4~0.5% 중개수수료
-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학원, 고시원, 사무소 등 모두 포함: 불법개조 후 주거용으로 임대
- 사전 정보없이 계약을 확정하고 나서 높은 중개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비일비재
- 실제 협의후에도 0.6~0.7% 선의 비용부담
- (단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모두 주거용 건축물 적용 요율로 통일
- (장기) 일정금액 이하 보증부 월세 임대차계약시 수수료율 정액화

3.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거주과정의 안정성 강화

- 불법 개조 건축물 중개신고센터 개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건축물 현황 파악
- 계약기간 다양성 제공,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공적 지원

■ 주거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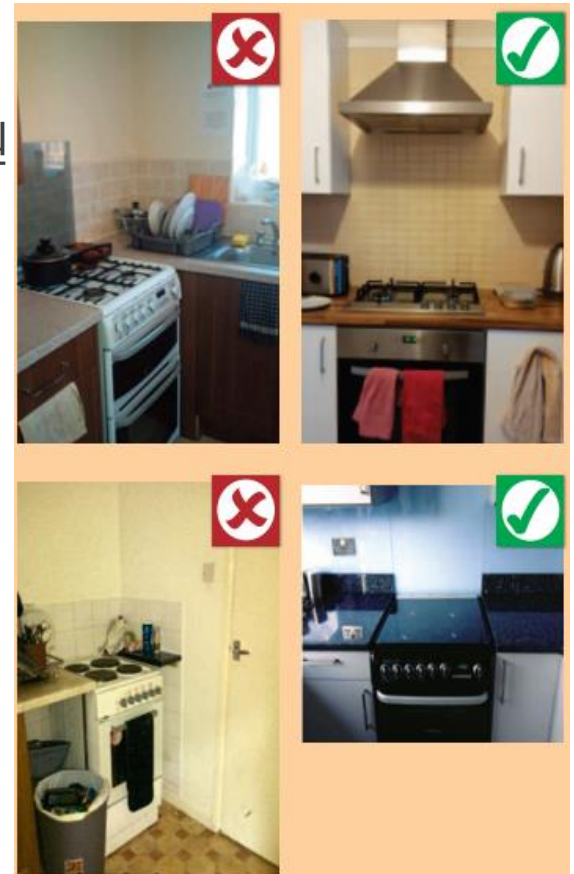
- 1인가구 최저(준) 주거기준 재정립, 준주택 임대등록제

<영국 HMO, 셰어하우스형 주택>

- 임대인 등록 의무화(일정 규모 이상)
- 최저주거기준 준수 필수, 연간 상태 점검
- 임차인이 주거기준 미달 임대인 신고 가능, 처벌 규정 강력
- **unlimited fine**

조리기구나 싱크가 실제로 안전하게 사용되지 못하므로 시설기준 미달, 문에 너무 근접하여 위치하므로 미달 →

<옥스포드시 HMO 부엌 기준>



자료: Oxford City Council

3. 청년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자립지원 강화
 - 소액보증금 매칭 프로그램(보증금 마련을 위한 매칭형 저축)
 - 공적 수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해도 제고
- 주거특성별 지원 강화
 - 월세거주자: 월세 지출 세액공제 부모 확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
 - 오피스텔, 셰어하우스 등 거주자: 명확한 관리비 부과기준 마련

그들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함께 고민

주거안정지원
'국토연구원'이 이끌어갑니다.

감사합니다○

(mspark@krihs.re.kr)

